■정부조직법 개정… 올 정기국회 상정

식품안전처·주택본부 신설

〈건설교통부〉

문화부→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고용노동부

여성부→여성청소년가족부… 차관직은 안 늘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 신설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작업 등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차관급 정무직을 더 늘리지 않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주택본부를 신설해 주택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대신 여성부와 청소년위 통합 과정에서 차관급 청소년위원장 자리를 없애 정무직 신설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우정본부를 우정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 직위로 격상시키려고 논의해 온 사항들도 부처간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과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기상청장과 통계청장의 차관급 격상, 차관급인 방위사업청 신설 등으로 정무직 고위직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장.차관급 정원은 현재 137명(장관급 40명, 차관급 97명)으로, 지난 정권 말인 2002년 당시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31명(29.2%)이 증가했다.

위원장이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친일행위자재산환수위원회 등 과거사관련 위원회가 참여정부 이후 잇따라 신설된 것도 고위직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업무 성격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마쳤다.

이번 명칭 변경작업은 노동부에서는 노사문제 조정 업무보다는 고용업무의 비중이 많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노동부로, 문화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거국적 지원의지 등을 담기 위해 체육을 추가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 관련 부분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했으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의 통합부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곧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성추행 의원' 의정활동 재개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최연희(무소속) 의원이 사건 7개월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일 국회 행자위에 참석,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이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고교평준화 지속 추진 외고 응시 지역제한도"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이미 결정해 시작한 정책은 다소간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정책을 자주 바꿔서 늘어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어떻게든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비롯한 외국어고교 응시 지역제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장기적 선결과제로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능력별 재능별 교육을 실현하는 일'로 꼽고 "이를 위해서는 수월성을 동반한 평등성과 자율성을 동반한 책무성을 균형있게 실현하겠다는 교육관련 주체들의 합의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대학의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성 강화, 평생학습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훈련 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0일 교육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교육부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순군수 보궐선거 민주 8명 공천 신청

10·25 화순군수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 마감 결과 총 8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이 밝힌 예비 후보는 김상규(54)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배동기(50) 전 화순 부군수, 양경수(59) 21세기 화순미래연구회 회장, 임호환(61) 전남지방건설심의위원, 전완준(47) 성안그룹 회장, 정치환(64)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감사, 정완기(64) 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장현(50) 전 광주매일 상무 등이다. 민주당은 공특위 논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건희회장 "국감 증인 부르면 나갈 것"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은 추석을 전후해 귀국할 계획이며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면 나갈 것이라고 1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저녁 뉴욕 맨해튼 피에르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한 뒤 뉴욕특파원단과 만나 "21일 유럽으로 간다"면서 유럽에서 머물다가 "한국에는 추석 전후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면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야지요"라고 대답, 국회가 요청하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만 머물면서 별로 다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뉴욕에 있는 동안 "모든 기업활동에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의향' 발언에 대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건 자칫하면 정치권서 배제될 수도"

민주당 '친 고건파' 신중식 의원 경고

민주당 신중식 의원(사진)이 20일 고건 전 총리를 향해 "자칫하면 시기를 잃고 정치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친(親) 고건파'로 분류되는 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안녕하십니까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고 건씨가 정치권과의 접근을 배제하고 있지만 모든 결정은 결국 정치권에서 이뤄진다"며 "고 건씨는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정치권하고 접선을 강화할 것인가가 초미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고 건씨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15%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대단한 역전극을 펴야할 것"이라며 "국가적 중요 현안, 국민관심사, 국민고통의 현장에서 자기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건 정치권 배제론'을 언급한데 대해 "고건 대망론과 기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안타까움과 애정의 표시"라며 "역전극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제는 공은 고건씨한테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고건씨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정치 10단 정도는 안되지만 역대 정권의 흥망, 개인 부침을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술수가 높은 고수"라며 "앞으로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민주개혁세력의 재결집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고건씨가 영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후에 한나라당이 변하는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한나라당-민주당 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연말 내년초에 어떻게 발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고건 '미래와 경제' 잇단 지방조직 창립

광주·전남지부는 11월 출범

고 건 전 국무총리의 자문그룹인 '미래와 경제'가 연쇄적으로 지방조직을 창립한다.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11월중 출범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지부를 창립한 미래와 경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 충남·대전, 다음달 19일에는 부산에서 각각 지부 창립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하순에 충북, 11월에는 광주·전남과 강원, 제주 지역에서 각각 지부를 창립키로 하는 등 사실상 전국조직화에 나섰다.

자문그룹 성격인 미래와 경제가 이처럼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최근 고 전 총리가 출범시킨 '희망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가 '정치세력화'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방조직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앞둔 고 전 총리가 서울 지역만을 근거로 하는 희망연대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와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미래와 경제는 "향후 미래와 경제의 각 지부들은 연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비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부 대표는 최영관 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게 되며 11월 중 창립기념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